

# ‘로또’라더니...정원미달 국공립 어린이집 많네

## 저소득층 자녀 몰리는 임대아파트 단지 등 기피

### 광주 5곳 중 1곳 못채워...학부모 인식전환 절실

광주지역 일부 국공립 어린이집이 입학 정원 미달 사태를 겪는 등 학부모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잇따른 아동학대사건 등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면서 ‘국공립 어린이집 입학=로또 당첨’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는데, 광주에선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8일 광주시와 각 구청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 현재 지역 내 국공립 어린이집 수는 전체(민간·법인 등 포함 1262개)의 1.74%인 22개다. 이중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22.73%인 5개다. 국공립 어린이집 5개 중 1개 이상은 정

원 미달사태를 겪고 있는 셈이다. 구별로는 ▲동구 2곳(국공립 어린이집 수 2곳) ▲서구 0곳(“ 6곳) ▲남구 1곳(“ 2곳) ▲북구 1곳(“ 8곳) ▲광산구 1곳(“ 4곳) 등이 다.

이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입소하면 주변에서 ‘로또 맞았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는 모두 25만6959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수가 2489곳(전체 어린이집의 5.7%)인 점을 감안하면 입소 경쟁률이 100대 1에 달한다.

이 같이 국공립 어린이집은 안정적인 재

정과 수준 높은 보육교사의 질, 책임있는 관리·감독으로 부모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다. 그럼에도 일부 국공립 어린이집이 외면받은 이유는 특정 어린이집에 대한 기피나 선호 현상 때문.

아무리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도 저소득층 자녀가 몰리는 곳엔 내 자녀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광주시 한 영구임대아파트에 위치한 A국공립 어린이집 입학 정원은 97명으로 현원은 77명으로 20명이 부족한 형편이다.

한부모세대 등 소외계층을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영유아보육법(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에 따라 소외계층 원생 비율이 20%에 불과한데도, 이 어린이집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있다는 이유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반면 임대아파트 등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입학 대기자 수가 100명을 넘는 등 그야말로 입학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날 현재 B국공립 어린이집 입학 대기자 수는 모두 191명(정원 80명)이며 C국공립 어린이집은 161명(80명)이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위치에 따라 ‘빈익 빈익빈’ 현상을 보이고 있는 셈. 일각에선 특정 어린이집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학부모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 북구 관계자는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 미달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면 “보육교사 수가 부족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충행기자 golee@kwangju.co.kr /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4  
해질녘 17:57  
달 뜨는 시각 13:19  
달 지는 시각 02:31

오늘의 날씨

는 내리는 밤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 늦게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부터 눈으로 바뀌었다.

◇지역별 날씨(℃)

광주	비포는 -2/4	보성	차차흐려져비 -2/5
목포	차차흐려져비 -2/4	순천	차차흐려져비 0/5
여수	차차흐려져비 2/5	영광	비포는 -5/3
나주	비포는 -5/4	진도	차차흐려져비 -2/4
완도	차차흐려져비 -1/5	전주	차차흐려져비 -2/4
구례	비포는 -2/5	군산	차차흐려져비 -3/4
강진	차차흐려져비 -3/4	남원	차차흐려져비 -4/4
해남	차차흐려져비 -3/5	홍산도	차차흐려져비 1/3
장성	비포는 -4/4		

◇비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서~북 0.5~1.0
남부 먼바다	북~북동 0.5~1.5	북서~북 0.5~1.5
남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서~북 0.5~1.0
서부 먼바다(동)	북~북동 0.5~1.5	북서~북 1.0~2.0
서부 먼바다(서)	북~북동 0.5~1.5	북서~북 1.0~2.0

◇생활지수

동파	25
운동	30
빨래	70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9:32 21:39	01:55 14:56
여수	04:44 17:04	10:53 23:18

◇주간 날씨

30(금)	31(토)	2/1(일)	2(월)	3(화)	4(수)	5(목)
☁	☀	☀	☀	☀	☁	☀
-1/4	-3/5	-3/6	-1/6	-1/6	-1/4	-2/4



“헌혈 동참합니다” 겨울철 시민들의 헌혈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28일 광주 에덴병원 허정 원장을 비롯한 50여명의 직원들이 헌혈을 하기위해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전남 오늘 밤부터 눈소식

광주와 전남에 오랜만에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9일 광주·전남 지역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기온이 떨어지는 밤부터는 눈으로 바뀌겠다”고 28일 예보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3도~6도로 일부 내륙에는 밤사이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다. 예상 적설량(강우량)은 1~5cm(5~10mm).

30일은 새벽까지 내리던 눈이 그친 뒤

흐리다가 낮부터 점차 맑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3도~7도로 이는 평년보다 1~2도기량 높은 것이다.

광주·전남지역은 최근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유지해 왔지만, 주말인 31일부터는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평년 수준으로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일부 내륙 지역에 다소 많은 눈이 쌓이겠으니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광주 초교 男선생님 더 줄어든다

### 올 임용시험 합격률 23.2% 사상 최저...남·녀 불균형 심각

올해 광주지역 초등학교 임용시험 여성 합격자 비율이 최근 9년 새 최대를 기록했다. 10명 중 7.6명이 여성 합격자다. 28일 광주시교육청이 발표한 초등교사 임용시험 결과, 전체 합격자 125명 가운데 여성이 96명으로 76.8%를 차지했다. 반면, 남성은 29명으로 23.2%에 불과했다. 이는 남성 합격자 비율이 지난해 27.0%보다 3.8%포인트 떨어졌다는 것이다.

비교적 많은 인원을 선발했던 2013년도는 전체 합격자 350명 가운데 남성이 110명으로 31.4%를 차지해 간신히 30%를 넘는 것을 제외하고 2010년부터 작년까지 남성 합격자 비율은 20%대를 간신히 유지했다. 신입교사 선발에서 남녀 성비 불균형은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등학교 등 일선 학교에서 오래전부터 나타나는 현상이다.

### ■ 광주 초등교사 남성 합격자 비율 추이



일선 초등학교도 여성 교사와 남성 교사의 비율이 8대 2로 성비 불균형이 심각하다. 학생들은 1학년부부터 6학년까지 여성 담임교사만 만나기도 하고, 6학년 담임이 모두 여성 교사여서 학생 지도에 애로를 호소하는 학교도 있다. 중·고등학교 역시 남성 교사가 부족해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젊은 남성 교사가 온갖 낯선 일을 도맡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성비 불균형이 심각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대책이 사실상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임용시험에서 남성만 따로 뽑을 수도 없고, 가산점을 줄 수도 없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여성 합격자가 남성보다 많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며 “형평성이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성적 순으로만 뽑기 때문에 당장 남성 교사 비율을 늘리기 위한 대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5·18 관련 가혹행위 피해...대법 “소송늦어 배상안돼”

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 따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개월 안에 제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모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김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1983년 9월 군 복무 중 5·18 관

련 단체에 가담한 혐의가 수사를 받다가 가혹행위를 당했다. 김씨는 2009년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2012년 4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과거사위원회가 의견을 표명한 때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제기된 소송은 김씨의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김씨 손을 들어줬다. 김씨는 1983년 9월 군 복무 중 5·18 관

/연합뉴스

#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 관련한 공개질의

한국신문협회의 회원 신문 및 통신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014년 12월 24일 입법예고한 지상파방송 광고총량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 관련하여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공개적으로 질의합니다.

## I.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묻습니다

### 1. 위원장은 ‘공개행정의 원칙’을 부인합니까?

광고총량제가 지상파방송의 광고매출 증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가 제각각이며 편차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고총량제 도입 시 지상파방송 연간 광고매출 증대 효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학회	케이블TV방송협회	556억(2011년) / 376억(2013년)	969억
2759억	1000억~1500억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예측자료도 내놓지 않은 채 도입 방침부터 발표했습니다. 특히 방송위는 이번에 광고총량제 도입효과를 따로 조사하고도 그 결과를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공개행정의 원칙’을 부인합니까?

### 2.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습니까?

이번 개정안으로 지상파방송의 60분짜리 프로그램에 붙는 프로그램 광고의 광고 시간이 현행 6분(24개 광고)에서 9분(34개 광고)으로 50%가 늘어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국민(시청자)들의 삶의 질과 시청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또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은 바 있습니까? 아울러 전체 미디어산업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신문·유료방송 등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습니까?

### 3. 미디어 간 ‘부익부 빈익빈’을 재촉하려는 속뜻은 무엇입니까?

미디어 정책은 어느 특정 매체에 편향해서는 안 되며 신문 유료방송 등 미디어산업 전반의 균형발전을 유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지상파방송으로의 광고 몰림현상이 가속화해 그렇지 않아도 경영여건이 취약한

신문과 유료방송 등은 생존 자체를 위협받게 됩니다. 미디어 간 ‘부익부 빈익빈’을 재촉하려는 속뜻은 무엇입니까?

### 4. ‘다양성 구현’이라는 미디어 정책의 핵심 가치를 치명적으로 침해하지 않습니까?

지상파방송은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독과점적으로 사용한다는 특성 때문에 공정성 객관성을 가장 중요한 책무로 하여 법적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내적 다양성의 원칙에 따라 균형 잡힌 보도를 의무화 할 뿐 아니라, 시간적 제약 때문에라도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표현하는데 한계를 가집니다. 반면 신문과 유료방송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지역적 이슈에 대해 진보에서 보수까지 표현되는 의견의 스펙트럼이 훨씬 넓습니다. 상이한 견해를 가진 다수의 매체 간 경쟁을 통해 여론다양성을 구현하는 특성을 가진 미디어가 신문과 유료방송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다양한 논조를 가진 신문 등의 존립은 공동체 내 여론다양성의 기반입니다. 또한 신문의 재정적 기반인 신문광고는 매우 중요한 ‘다양성 촉진도구’입니다. 이번과 같이 지상파방송에 광고를 몰아주려는 법규는 ‘다양성 구현’이라는 미디어 정책의 핵심 가치를 치명적으로 침해하지 않습니까?

### 5. 공영방송의 공공성이 위축될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모든 방송에 광고총량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향조경제를 견인하는 방송광고시장 활성화방안 계획안, 2014. 1) 이는 사실과 크게 다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공영방송은 광고 자체가 금지돼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지상파방송은 공·민영이 법적·제도적으로 분리돼 있지 않습니다. 공·민영 이원구조에 대한 정책철학도, 제도적 틀도 부재한 상태에서 지상파방송과 관련된 규제 변화는 모든 공·민영 지상파방송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공영방송의 공공성이 위축될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 6. ‘지상파 내부문제’를 광고 몰아주기로 미봉해주려는 것 아닙니까?

지상파방송의 경쟁력 하락은 방만한 경영, 트렌드에 민감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 제작구조, 콘텐츠 투자에 대한 인식 부족 등 내부 요인에 기인한 결과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상파 내부문제’를 광고 몰아주기로 미봉해주려는 것 아닙니까?

### <지상파방송의 방만 경영 사례>

- 1) KBS·MBC·SBS 등 지상파방송은 2014년 월평균 중계료로 825억 원 집행, 이는 2009년 월평균 중계료인 약 275억 원의 3배에 달함. 광고업계에서는 사액이 평가가 때문에 시장력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강행. 광고계약에는 지상파 3사가 적인 월도에서 300억 원 이상의 차이를 본 것으로 추정.
- 2) KBS는 2009년부터 세전(세전) 이익이 500억 원을 넘을 경우에만 특별성과급을 지급했으나 2010년 관련 규정을 없애고 8년간의 특별성과급 평균액수(수)를 기본급으로 전환해 2010~2013년 4년간 전액(전액) 직원에게 238억 원을 지급. 급여 반납 안함. 2013년 직원 1인당 평균보수(수) 9547만 원. (경사협 등 자료)
- 3) MBC는 전체 직원 1425명 중 차장 이상의 간부만하여 987명으로 69.3%에 달함. 2009년 18명(1.2%) 국장 직급자가 2013년 83명으로 4년 만에 4.6배 증가. 신사옥 이전으로 학내(학내) 비용 지출하고도 올해 임원급(8.5%)인상. (방송문화진흥회 자료)
- 4) SBS는 장기보유에 대한 배양제 비율을 2011년 23.6%, 2012년 37.9%, 2013년 41.1%로 해마다 인상.

## II.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묻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심지어 방송 외 타 미디어의 회생을 강요하기까지 합니다. 이에 반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신문 등의 경영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은 물론 전체 미디어정책의 총괄 부처로서의 역할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광고총량제가 신문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거나, 이에 대한 대책 등을 자체적으로 강구한 사실이 있었는지 밝혀 주십시오. 신문산업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이나 로드맵이 있다면 함께 공개하여 주십시오.

2015년 1월 26일